



주간통일정세 2010-23(2010.05.31~06.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리정부 포병사령관 사망(6/2,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북한군의 리정부 포병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전하며 “김정일 동지가 조선인민군 장령(장성)이었던 리정부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 1997년 군 중장이 된 리 사령관은 2009년 1월부터 포병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같은 해 3월부터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을 겸했음.

- **김정일…軍공연 관람(6/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호위사령부인 제963군부대의 예술 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김 국방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인민군 군인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불사신의 용사들로 자라났다”며 “이 무적의 대군이 조국방선을 사수하고 있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공연에는 최근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윤정린 호위사령관과 김성덕 상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경옥·리제강·리제일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동행

- **北 리제강 당 제1부부장, 교통사고 사망(6/2, 조선중앙방송)**
 -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2일 사망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제강 동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2일 0시45분 80살을 일기로 서거했다”면서 “리제강 동지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해 온갖 정열을 다바쳤다”고 평가
 - 리 제1부부장은 1973년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공직에 입문, 1982년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김정일 서기실 서기로 발탁됐고 2001년부터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직을 수행, 지난 4월 사망한 리용철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함께 후계자 김정은의 생모인 고 고영희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일…평북 기계공장 현지지도(6/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며 이 공장에서 새로 만든 최신식 기계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 도입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당 부장들인 김경희·장성택,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남흥청년화확 현지지도(6/5,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연탄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평남 안주시의 남흥청년화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비날론 대경사에 이어 남흥가스화대상건설이 완공돼 비료가 쏟아져나오게 된 것은 또 하나의 대경사이고 이제는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현지지도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남…“아버지 건강 좋다, 천안함? 모른다”(6/6, 중앙일보)**
 - 신문은 지난 4일 마카오 신도심 코타이에 있는 알티라 호텔의 식당 엘리베이터 쪽에서 김정남을 만나 1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김정남은 아버지 김 위원장의 건강을 묻는 질문에 “좋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천안함? 나는 모릅니다”라고 짧게 말한 것으로 보도
 - 김정남은 또 유럽 쪽으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망명설에 대해서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전혀 유럽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신문이 전함.

- **김정일…평양 교외 과수농장 현지지도(6/6,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보안부(경찰청 해당)에서 건설해 운영하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7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과일 보관고와 세척-절단-말리기(건조)-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사과말린편공장’을 둘러본 뒤 만족을 표시하고 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기념촬영을 함.
 - 현지지도에는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경공업)·장성택(행정) 부장, 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 동향

- 6/ 2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6/2, 중통)
 - 윤정린(대장), 김성덕(상장), 김경희(黨부장), 김경옥·이제강·이재일(黨 제1부부장들) 등 동행
- 6/ 2 김정일, 6/1 故 이정부(포병사령부 사령관)의 빈소에 화환 전달(6.2, 중통)
- 6/ 3 김정일, 평안북도에 위치한 오문현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6/3, 중통·중방)
 - 김평해(평안북도위 책임비서), 김경희·장성택(당 부장들), 현철해·이명수(국방위 국장들) 동행
- 6/ 3 김정일, 故 리제강(80세, 黨 제1부부장) 빈소에 화환 전달(6/3, 중통·중방)
- 6/ 5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6/ 6 김정일, 평양 교외 과수농장 현지지도(6/6, 중통)
 - 노동당의 김기남 비서, 김경희·장성택 부장, 주규창·리재일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이 평안북도에 불도저를 보내준 것에 대한 「군민연환대회」, 5/31 신의주에서 진행(6/1, 중방)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이용무(국방위 부위원장), 김평해(평안북도 당책), 심상대(軍 상장), 김창식(농업상) 등 참가
- 김정일 저작(『경공업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발표 20돌 기념 중앙보고회, 6/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6/1, 중통)
 - 김영일(내각 총리), 광범기·박명선(내각 부총리), 최영림(평양시黨 책임비서) 등 참가

나. 경제

■ 기타 (대내 경제)

- 3월 5일 청년광산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공, 5/30 조업식 진행(5/31, 중방)
- 강령군(黃南) 등암리에 50여동의 문화주택 새집들이, 5/30 진행(5/31, 중방)
- 김정일의 중국 비공식방문(5/5~7)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3종) 및 국제아동절 60돌(소형전지 1종)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대회(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 기념우표 각각 발행(6/1,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전 가구 대상 탈북자 조사(5/31, 아사히신문)

- 신문은 선양(瀋陽)발로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전(全) 가구를 대상으로 탈북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 치안 당국은 4월초부터 오후 6시 이후에 각 가정을 방문해 호적에 등록된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지를 확인, 없으면 이유를 묻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들을 관련 시설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연행자가 이미 1천명을 넘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평양시에서는 17세 이상 주민에게 새 신분증을 나눠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하지만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조사를 하는 건 맞지만 세부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 NK지식인연대 김홍광 대표는 "북한은 4월이 아니라 2월부터 주민 등록 재확인사업을 벌였고 최근에 완료했다"며 "표면상 탈북자 조사라고는 하지 않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2005년경)에 행방불명된 이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北 주민-상주 외국인 휴대전화 통화 불가(6/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주민과 상주 외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신망이 분리돼 있어 이들 사이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에서 일하는 비정부기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북한 주민용 번호는 서로 연결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직원과 업무에 필요한 통화를 하려면 북한 안내원과 연결한 뒤 안내원이 말을 전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이 방송의 설명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여자축구 대표팀, 2010년 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 2위 소식 보도 (5/31, 중방)
- 北 성·중앙기관 일꾼들·정무원들 등, 농촌 모내기사업 적극 지원 (6/2,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안보리, 천안함 조사결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6/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관련,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



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문제가 안보리 이사회에 제기될 경우, 그 성원국들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선차적(우선적) 주의를 돌리고 자체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미얀마 핵개발 은폐 터널구축 지원(6/4, 알-자지라; 연합뉴스)

- 알-자지라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핵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터널 구축을 북한이 지원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고 보도
- 알-자지라는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망명 미얀마방송국인 ‘버마 민주화 소리(Democratic Voice of Brma, DVB)’가 최근 미얀마에서 망명한 전직 장교인 ‘사이 테인 윈’ 소령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와 사진 등 기밀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힘.
- DVB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공습 공격에 대비해 지하터널 일부를 군 지휘통제소로 사용할 수 있게 또 다른 터널은 비밀 무기와 장비 저장용으로 축구장 두 개 크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건설했음을 보여주는 수천 장의 사진과 망명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북한이 전문 기술을 제공해 이 터널망의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천안함 사태 관련 미국이 “남조선 당국을 내세워 꾸며낸 아시아판 9.11사건”에는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과 같은 반테러전의 각본까지 상정될 수 있다”고 주장(6/1, 조선신보)
- 日 ‘하토야마’총리 사임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 미국에 굴복(후텐마 미군기지 관련 美요구 수용)한 그에게 일본 인민과 역사가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6/3, 중통)



3. 대남정세

[천안함 관련]

○ 천안함 군사도발 사태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對北조치 持續 비난

- ‘왜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5.31/평방)
- ‘갈수록 드러나는 모략극의 내막’(5.31, 평방)
- ‘천안호 침몰 조작사건을 통해 노린 진의도’(5.31, 평방)
-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러낸 호전적 망발’(5.31, 중방)
- ‘동족대결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5.31, 중통·노동신문·중방)
- ‘여론조작 물이가 낡은 희비극’(5.31, 평방)
- 국가자원개발지도국 처장 김홍주 등, “날조극을 美日 당국자들이 비호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5.31, 중통)
- ‘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망동’(6.1, 평방)
- ‘함선 침몰사건은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괴뢰 역도의 잔인한 모략극’(6.1, 중방)
- ‘민족의 통일염원을 짓밟은 극악한 반통일 악당’(6.1, 평방)
-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안고’(6.1, 평방)
- ‘북남관계 파탄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어리석은 궤변’(6.1, 평방)
- ‘역적패당이 꾸며낸 허황한 날조극’(6.1, 중방)
- ‘일방적인 짜맞추기에 의한 날조극’(6.1, 중방)
- ‘터무니없는 조작극’(6.1, 중방)
- ‘도마 위에 오른 반역정권’(6.1, 평방)
-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북닥소동’(6.2, 평방)
- ‘사대매국노들의 국제공조 놀음’(6.2, 평방)
- ‘함선 침몰사건과 관련한 명백한 자료공개를 요구’(6.2, 중방)
-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망동’(6.2, 중방)
- ‘모략의 산물 20일’(6.2, 평방)
- 조명희(낙랑옷공장 지배인), 김영남(평양 외국어대학 청년동맹 비서), 김정수(평양강철공장 작업반장), 유복순(사리원시 미곡협농 농장원), 리경일(평양외국어대학 학생), 김태하(금성제1중학교 교장) 등 일꾼-노동자-학생 등 천안함 조사발표 비난(6.1, 중방·평방·중통)
-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소동’(6.3, 중방)
- ‘사건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예리한 논거’(6.3, 중방)
- ‘진실을 가리우는 망동’(6.3, 중방)
- ‘뻔뻔스러운 거짓말’(6.3, 평방)
- ‘파멸을 촉진할 도발적인 주적 타령’(6.3, 평방)
- ‘사건 날조범들의 필사적인 몸부림’(6.3, 평방)
- 녹음구성 ‘흑백을 전도하는 남조선 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징벌을’(6.3, 중방)
- 역적패당의 흉악한 기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6.3, 중방/평양시 인민위 김만복 국장)



- **北, 개성공단 개발 계속, 등록설비 반출불허(5/31,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함.
 -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
 - 이에 덧붙여 북한은 특히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함.

- **北신문 ‘주적 개념’ 부활은 북침 기도(6/1, 조선중앙통신)**
 -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다시 넣는다는 남한정부 방침과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에 대한 ‘주적개념’의 공식 명문화는 곧 북침전쟁 도발기도의 명문화”라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호전광의 분별없는 대결전쟁소동’이라는 개인필명 논평에서 “주적 개념의 정식 부활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 도전”이라며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다시 꺼내 대결을 선동하는 것은 전쟁도발도 서슴지 않으려는 반민족적 망동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함.
 - 신문은 또 “(남조선) 괴뢰들이 함선침몰 사건을 악용해 북침전쟁 도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도발자들의 ‘대응’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무자비한 행동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변

- **천안함 날조…괴서한 대북교역업체에 발송(6/2, 연합뉴스)**
 -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는 괴서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에 무더기로 발송된데 이어 대북교역업체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
 -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짜리 편지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보냈으며, 발신처는 ‘중국 북경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돼있음.
 - 이어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체 2곳에도 팩스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
 - 문건은 북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A4용지 5장짜리와 민족화해협의회 명의의 ‘남녘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고



함'이란 제목의 A4용지 4장짜리

- 또 이날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또 다른 수산물 수입업체에도 같은 내용의 괴서한이 팩스로 발송
- 이들 괴서한에는 '천안함 사태는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조선 인민들이 선거를 통해 역전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한다.'는 선전선동 문구가 담겨있음.

● **판문점 JSA 근무 북한군 철모 착용(6/2, 연합뉴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철모를 쓰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유엔사 관계자는 "판문점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지난 27일부터 철모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힘.

● **北자강도 등 지방서도 南규탄 군중대회 열려(6/2,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평양에 이어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에서도 남한과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군중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남조선 호전광과 미제 침략자의 반공화국 대결모략책동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극도로 침체화됐다면서 특대형 모략극을 조작한 원수들의 망동은 조선(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보고자들은 또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은 지금 적들의 응징에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대응하고 전쟁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징벌을 안길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南선거관련 연일 '표로 심판'선동(6/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
- 북한은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남한에서 주요 선거가 있을 때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하도록 선전·선동하는 내용을 자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보내음.
- 통신에 따르면 선거 전날인 1일에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남녘의 동포 형제자매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남녘 동포 형제자매들이 보수패당에 철추를 내림으로써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부추김.
- 지난달 29일에는 역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발표, "지방자치제 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며,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 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떨쳐 일어나 역적패당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였던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반통일 대결에 환장한 매국역적의 죄악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반드시 결산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제선거는 살인정권에 대한 인민의 준엄한 심판장으로 될 것”이라고 언급
- **北, 민심이 남측 정권에 등 돌렸다(6/3, 교도통신)**
- 북한 외무성의 로정수(魯正秀) 연구원은 평양에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 중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인심이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정권 공약을 버린 결과로 자업자득이다.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통신 ‘남한 인민들의 단호한 징벌’(6/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3일 남한의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남조선의 민주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극우보수적인 ‘한나라당’은 대참패를 당하였다”고 첫 반응을 나타냄.
 - 통신은 이날 “괴뢰 보수패당은 심각한 파쇼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모략적인 괴뢰군 합선 침몰사건까지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전쟁전야의 사태로 몰아가면서 온갖 단말마적 발악을 다하였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그리고 반통일, 반공화국 대결소동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단호한 징벌이며 준엄한 철추”라고 주장
 - 또한 통신은 “내외신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주목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 ‘민주와 평화를 지키려는 민심의 분출’, ‘독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널리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한반도 긴장…언제든 전쟁 날 정도(6/4, 연합뉴스)**
-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차석인 리장곤 공사는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본회의에 참석, “한반도의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함.
 - 리 공사는 북한군과 인민들은 전면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수단에 대해 경계태세를 펴고 있으며,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화해를 향한 변화와 발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반복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한 정권에 의해 이뤄진 (천안함) 조사 결과는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완전한 날조”라



고 주장

- 또한 그는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어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하게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南정부의 천안함 관련 대북조치(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금지) 후, 통일부는 깐마늘, 이류, 건설 단자 등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 반입을 허용(6/1, 연합뉴스)
- 北, 南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안함 날조’ 관련글 유포(6/1, 연합뉴스)
- 북한 주민 1명 서해로 귀순(6/1, 연합뉴스)
- 통일부는 앞서 1일에 이서 오늘 의류, 신발 등 7억원 규모의 대북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을 전날 승인(6/4, 연합뉴스)

북한연구센터 제공



● <외교부, ‘천안함’ 회의…안보리대응 점검>(6/6)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천안함 사건 관련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외교 당국자가 전했다.
-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는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 형식은 물론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주요 이사국들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형식만 가지고 ‘어느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시기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천영우 제2차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국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안보리 의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민군 합조단이 유엔 안보리에서 브리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사안 모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천 차관의 방중 시점은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 (중국과) 협의하는 게 적절할지가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안보리 대응을 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천안함 사태를 해결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 이날 회의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천 차관과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신동익 국제기구국장, 김홍균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천안함 대응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게이츠 “北책임 묻기 위한 추가조치들 고려”(6/5)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5일 “천안함 사태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미국은 북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 안보회의 제3차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또 “북한은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만 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천안함 침몰 이후 미국과 한국, 다른 우방들은 긴밀한 협의를 해왔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공동군사훈련을 할 것이며,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설명



- 한 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군 함정을 무력으로 공격한 군사도발이며, 유엔현장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런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Two Track Approach)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선군정치’를 외치며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역내 및 세계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추구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적극 동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 군사력 증강 방향을 설명해 달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한반도에서 정전사태(체제)가 비교적 (잘) 유지돼 왔고, 군은 전면전이나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늘 고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과 한국을 지원하는 주한미군과 그런 측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떤 보강이 필요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천안함 사태로 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문제에 언급,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는 전작권의 전환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작권은 별도의 문제로서 검토할 것이고 군사적인 협력, 군사적인 보강 사안들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대통령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 절대 없다”(6/5)**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로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다”면서 “전면전쟁 가능성은 없고 다만 국지적인 평화 위협 행위는 간혹 나오고 있는데 강력하게 억제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폐쇄성과 독재 체제 등을 지적하면서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을 빠르게 개방시켜 중국처럼 산업화의 길을 걷게 하고 핵을 포기하는 대신 정권 유지를 보장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는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한 상태"라면서 "천안함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2천 300만 북한 주민의 최악의 극빈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토니 추 SBF 회장을 비롯한 싱가포르 기업인들이 한국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당부했음.
-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지난해 부동산 분야가 주춤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마치 인위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싱가포르 기업인들에게 한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에 예정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IR)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음.

● 게이츠 "대잠훈련·안보리처리, 韓 주도 따를 것"(6/5)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한미 간 대(對)잠수함 합동훈련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천안함사태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5일 오전 상그릴라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면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도발에는 응분의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잘못하면 그것이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게이츠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한국의 천안함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한국정부가 이번 사태를 다루는 게 아주 적절(masterful)했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접견 모두에 천안함 사태 발생 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미군 오폭설 같은 것이 나도는 것"이라고 말하자, 게이츠 장관은 "어제 상그릴라 대화에서 '어떻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에 북한에 대해 적당히 묵인하고 넘어가면 한반도 평화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천안함’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6/5)

-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됐음. 정부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주(駐)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 12, 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음.
-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클로드 헬러 주유엔 멕시코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서한을 제출했으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영문요약본이 서한에 첨부됐음. 정부의 서한 제출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정부의 안보리 공식회부에 따라 유엔 안보리 의장은 조만간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회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의 의제 채택과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처리방향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대(對)중국 설득 또는 압박 공조에 나서고 이에 맞서는 북한의 외교적 맞대응이 가시화되면서 안보리를 무대로 한 천안함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안보리 대응수위와 관련,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결의안보다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urge, call upon)하는 내용의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적인 설득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으로 대응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앞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문해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를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들과 잇달아 만나면서 안보리 회부에 앞서 막판 정지작업을 벌이고 이날 오후 귀국했음.



● 월러드 “北, 새로운 도발준비 징후 없어”(6/4)

- 로버트 월러드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4일 북한이 현재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월러드 사령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태도를 감안해 북한의 움직임에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월러드 사령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기도하는 징후를 목격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지역의 누구나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태도를 감안해 북한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북한의 이례적인 군사 움직임이나 다른 도발 행위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월러드 사령관은 또 미군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이동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경계를 강화토록 했다고 전했다.
- 그는 미군은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천안함 위기를 ‘대단한 자제력’을 발휘해 대처했다고 높게 평가했음. 이와 함께 월러드 사령관은 북한이 미얀마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미얀마와 북한 정권의 유대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안보리, 천안함 조사결과 인정하면 초강경대응”(6/4)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와 관련, “일방적인 조사 결과만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논의를 강행한다면 그 목적의 불순성이 명백해질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초강경 대응해도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북측의 이 같은 언급은, 유엔 안보리가 우리 측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할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이 문제가 안보리 이사회에 제기될 경우, 그 성원국들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선차적(우선적) 주의를 돌리고 자체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정부는 이르면 4일 중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공식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러시아를 방문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3일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을 만나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음.



● 美 “국제사회, 北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6/3)

- 미국은 2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종류의 비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일치된 대응을 국제사회가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언제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의 리드를 따를 것”이라면서 한국 측 결정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러시아 외무 “한반도, 폭발 위험 상황”(6/2)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일 한반도는 현재 ‘폭발 위험(explosive)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 군함(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TV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美합참의장 “北 추가도발 가능성 우려”(5/31)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30일 북한이 천안함 어뢰공격에 이어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없어서 추가적인 행동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또 “(한반도는) 우리가 안정유지 면에서 항상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멀린 의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정치, 외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긴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멀린 의장은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지난주 유엔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집단에 무기를 수출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미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도 거세짐에 따라 이런 의혹이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한편 멀린 합참의장은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



연해 탈레반 거점인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는 올 연말에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멀린 의장은 내달 진행되는 칸다하르 작전이 아프간 전쟁의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음.

● “北 오판시 5가지 전쟁 시나리오 가능” <IHT>(5/31)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31일 북한이 오판했을 때 천안함 사태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5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음. IHT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도발→관련국들의 양보→협상’의 패턴이 충돌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패턴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북 강경책, 북한의 권력 승계 위기 등으로 인해 과거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봤음.
-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로 ▲서해상에서의 충돌 ▲비무장지대 대북 선전 재개에 따른 충돌 ▲후계 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쿠데타 ▲북한 내부붕괴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관련 도발 등을 꼽았음. 우선 IHT는 서해에서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같은 교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바마 행정부의 첫 번째 걱정거리라고 소개했음. 서해에서 심각한 교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개입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임. 이어 신문은 정보 당국이 위기 고조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조사되기 전까지 한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그만한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음. IHT는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통한 대북 선전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격파사격과 한국의 대응사격, 더 나아가 북한의 서울 공격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음. 또 이런 시나리오대로 될 경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이 확성기에 의지하는 방안을 재고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소개했음.
- 아울러 IHT는 ‘검증 안 된 후계자’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치적 쌓기 차원에서 대남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과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투쟁이 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정도의 폭력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또 다른 ‘전쟁 시나리오’로 꼽았음. 여기에 더해 IHT는 북한이 권력투쟁 속에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한·미가 중국과 맞서는 상황을 또 다른 시나리오로 상정했음. 이어 신문은 북한이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망을 따돌리고 핵무기 제조방법 등을 중동과 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상황을 마지막 시나리오로 비중 있게 거론했음. IHT는 미 행정부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보다 핵기술 수출 결정이 더 큰 걱정거리라면서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 사막의 원자로



를 폭격하기 전까지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시리아 원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놓쳤다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대북 경제제재…호두서 레몬즙 짜내는 격”(6/5)

-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이 4일 전했다.
- CSM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제재 강화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것 같으며 이는 ‘숲 속에서 전기 없이 사는 아이에게 Xbox360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음.
- 미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 국내총생산은 약 400억 달러로 카메룬에 이어 97위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1천 700달러로 방글라데시나 짐바브웨와 비슷한 수준임. 또 취약한 전력상황 때문에 (핵 물질을 제외한) 제품 생산 능력이 쇠퇴해 현재 주요 수출 품은 생선, 나무, 광석 등이라고 CSM은 전했다.
- CSM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 측이 주문한 요트를 이탈리아 당국이 압수하는 등 일부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는 호두에서 레몬즙을 짜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음. 또 “미 의회조사국의 한 보고서도 북한에 대한 서구 사회의 (제재)수단은 제한돼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CSM은 덧붙였다.

● 유 외교 “美, 北 무역·금융·무기거래 제재 검토”(6/2)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천안함 후속대응과 관련, “미국은 기존 제재장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북한의 위조지폐·마약·담배 거래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유 장관은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북한의 무역·금융·무기거래 등을 제재할 체계를 거미줄처럼 갖추고 있으며 현재 이를 100%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강도를 높여 재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면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해야 하고 이때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 차단을 통제하면 무기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식량·연료 등 필수적인 것은 외국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차단하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유 장관은 천안함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시기와 수위에 대해 “안



보리에 빨리 회부해서 논의를 길게 할지, 상임이사국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할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회부 시기는 미국·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표를 해야 하는 결의안과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 간 합의로 처리하는 의장성명 등 대응 수위도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세계적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리 조치를 끌어내기 쉽지만 천안함 사태는 남북 간 분쟁으로 볼 수도 있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어느 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충돌 자제에 무게를 두지만, 우리는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에 강조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전문가팀을 보내는 등 적극적이어서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또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가 없더라도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의 개별적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경비대 총격…中밀수꾼 3명 사상(6/6)

- 북한 경비대가 최근 압록강에서 밀수에 나섰던 중국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압록강 하류 신의주 부근에서 밀수를 위해 북한으로 접근하던 중국인 밀수꾼들이 탄 배에 북한 경비대가 사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1명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혔음. 부상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이들은 애초 북한 파트너들과의 약속에 따라 신의주로 접근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대폭 강화된 북한 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화를 당했음. 이들은 단둥에서 꽤 알려진 대북 밀수꾼들로, 이날 북한의 동(銅)을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총격 지점의 중국 영토는 신압록강 대교가 건설될 예정인 단둥(丹東) 랑터우(浪頭)로, 이 일대에서는 그동안 북중 간 밀수가 은밀히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압록강에서의 북중 간 밀수는 공공연한 비밀로, 북한 경비대도 밀수꾼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묵인해왔다”며 “북한 경비대가 총격을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신의주에서 북한 군인들이 낙하산 훈련을 하거나 배를 타고 압록강 일대를 순찰하는 모습이 목격됐음.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북한의 체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군사적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체제를 이해하기가 쉽다”면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의 결정에 개입할지가 오히려 미스터리”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자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음.

- 소르망 교수는 또 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잠재적 경쟁 상대는 ‘통일 한국’이라고 말했음. 그는 “중국은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미국과 함께 세계의 두 축이 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의 경쟁국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라고 말했음. 소르망 교수는 이어 “일본은 자국 내에서 힘이 약해지고 있어 경쟁 상대가 안 되고 중국은 통일된 한국을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며 북한을 붙잡고 통일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그는 “내일이라도 중국에서 선거가 실시되고 민주주의가 들어서 중국이 바뀐다면 북한에 대한 입장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갈등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방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전적이고 신중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음. 또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방선거 자체로 의미를 한정해야지 국가적 범위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한편, 이번에 출간한 ‘원더풀 월드’에 대해 소르망 교수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려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필했다고 소개했음. ‘원더풀 월드’는 소르망 교수가 2006~2009년 블로그에 올린 400개의 칼럼 중에서 시의적절한 것을 모아 엮은 것으로 세계화 현상과 전망 등을 분석했음.
- 그는 “독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긴 분량의 책을 읽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고 싶어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글을 썼다”며 “작가가 작품으로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작품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음.
- 또 한국의 가수가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라면서 “우리가 이미 공통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정학적 한계가 더는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음.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진 소르망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음.



● 中 혼춘-北 원정리 두만강 대교 개통(6/3)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혼춘(琿春)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 보수 공사가 완료돼 1일 개통됐다고 연변일보가 3일 보도했음. 이 다리는 혼춘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통하는 다리로, 지난 3월 보수 공사에 착수했었음. 이 다리 보수 공사는 애초 이달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기가 한 달여 단축됐음.
- 두만강 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중국의 라진항을 통한 동해 해상 항로 운송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임.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초 혼춘-라진항-상하이 해상 항로 개설을 승인했으며 이 항로의 해상 운송을 맡게 될 다롄(大連)의 위련(宇聯)은 지난 18일 혼춘에 자회사인 혼춘중련(中聯)을 설립했음. 이 해상 항로가 열리면 혼춘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비롯해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연간 100만 t가량 남방으로 운송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를 통한 해상 진출을 모색해왔으며 2008년 다롄의 창리(創立)가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그 꿈을 이루게 됐음. 창리는 이미 라진항 1호 부두 1호 정박지 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임.

● “中, 김정일 추가도발 저지해야” <WP>(5/31)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WP)는 31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의 추가도발을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중국의 한국 위기’(China’s Korea Crisi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한 사이의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좀 더 책임 있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밝혔음.
- 이와 관련, 신문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 시 기권할 것이라는 외교가 일각의 관측을 염두에 둔 듯 “안보리 결의 시 기권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중국이 당장 북한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안보의식을 자극,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음.
- 그러나 신문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 등 지난주 벌어진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은 ‘범죄 국가(북한)’를 지원해서 안되며, 늘어나는 영향력이 항상 호의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조만간 중국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한편 신문은 원자바오 총리가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이 대통령의 영문 철자를 ‘Lee Myung-bak’이 아닌 ‘Lee Myun-bak’이라고 적는 실수를 했음.



라. 기 타

● “韓,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배치 검토” <홍콩지>(6/6)

- 한국이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유명한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한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고,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음.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그와 같은 움직임(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군사정책과 예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이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한국이 배치를 검토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은 MD체제의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금년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조만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배치 문제에 정통한 한국의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검토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우리(한국과 미국)는 한국을 방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신문은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국방어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 신문은 또 한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데는 중국이 금년 들어 미사일 요격시험을 한 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음. 중국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육상 기지에서 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육상 및 해상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MD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MD 체제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아시아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SCMP는 보도했음. 한편 최근 폴란드에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北, 미얀마 핵무기 개발 지원” <ABC>(6/5)

- 미얀마 군사정권이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등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취득했으며, 이에는 북한의 협력이 있었다고 미국 abc뉴스가 4일 보도했음.
- abc뉴스는 최근 미얀마에서 망명한 장교인 사인 테인 원과 가진 인



터뷰와 그가 제시한 문서들을 토대로 북한이 미얀마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소령 출신인 사인 테인 윈은 자신이 새로운 기술이 시연되는 시설을 방문하고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증언한 뒤 “그들은 로켓과 핵탄두를 갖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 abc뉴스는 윈 전 소령이 빼돌린 기밀자료 등을 자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농축을 위한 부품과 함께 메이모시 인근 지역의 비밀 핵시설 등이 발견됐다면서 유엔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러 잡지 “北, 위험한 상습범으로 변해”(6/4)

-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의 유명 주간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어린 아이로 비유하면서 위험한 상습범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 4일 시사 주간지 ‘이토기’ 최신호는 지난해 1월 북한의 6자 회담 불참 선언 이후 미국이 북한을 식탁에 숟가락을 내리치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로 비유한 것을 다시 상기시켰음. 그러면서 잡지는 북한이 위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엔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식의 간단한 게임을 통해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다면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그것을 악용하는) 위험한 상습범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 잡지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한국의 주장이 맞다면 이는 북한 내부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런 모험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잡지는 러시아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 하지만 한국에 전문가팀을 보낸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고 전했다.
- 잡지는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 부분 양보를 얻어낸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북한에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이번 주 뉴스위크 러시아판도 ‘한국의 새로운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김정일은 북한이 약하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면 더욱이 후계자로 지목된 3남 김정은은 군 통솔 경험이 없어서 군 간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자 무력 도발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음. 이와 함께 잡지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릴 뉘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 러시아 외교관은 이 잡지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의 경제 상



황은 확실히 좋지 않고 화폐개혁 이후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어 북한의 큰 형인 중국의 행보가 주목되는 데 북한이 중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맞고 이는 지난달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더 확실해 졌다고 전했다. 국립대만대 첸민 연구원은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는 못했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 “UNICEF, 2015년까지 1억3천만 달러 대북지원”(6/2)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억3천만 달러를 들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UNICEF는 예산과 외부 지원을 포함해 1억2천800만 달러(한화 1천570여억 원)의 지원 계획을 담은 사업안을 집행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체 예산의 66%인 8천500만 달러는 보건 사업에 투입되고 UNICEF는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대책기금’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말라리아 및 결핵 발병을 줄일 계획이다.
- 또 만 1세가 채 안 된 어린이의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 사망 비율을 줄일 예정이며, 이밖에도 영양사업과 교육사업에 각각 1천200만 달러, 수질개선 사업에 1천400만 달러가 책정됐다. UNICEF는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유엔의 ‘새천년개발 목표’를 북한이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보면서 북한의 심각한 영양실조 실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VOA는 전했다.

● “南·北 다투면 득보는 건 美” <中전문가>(5/31)

- 최근 남북한이 서로 다투면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과 평양에서 특파원을 역임한 쉬바오강(徐寶康) 인민일보 대기자는 31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가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지 않는다면 미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쉬 기자는 우선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미국은 한반도를 전세계 전략 요충지 중 하나로 판단, 한국에 미군을 장기 주둔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의 한반도 긴장은 주한미군 존재가치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임. 그는 남북관계가 좋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났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두 번째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미국으로서는 무기를 판매해 거액을 벌어들일 기회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첨단무기로 한국을 무장시킴으로써 이미 거액을 벌어들였고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한국 등 동맹



- 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게 그의 논리임. 세 번째로 한반도의 긴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내 과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그는 주장했음.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부상과 동북아 각국의 교류 및 협력 강화는 미국 입장에서는 홀대받은 것으로 느껴졌던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한·미·일 3각 동맹은 현재 신속하게 회복 중이란 것임.
- 그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비롯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집권 후 일본과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벌어지는 등 한·미·일 3각 동맹구도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지위 회복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분석했음. 쉬 기자는 이런 미국의 의도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태도에서 묻어난다고 지적했음. 그는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지도부는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는 등의 조치에는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음.
 - 다른 전문가들도 그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음. 국제문제전문지인 세계신문보(世界新聞報)도 이날 ‘미국의 어부지리가 분쟁완화에 영향(지장)을 줄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유사한 분석을 실었음. 관영 중앙(CC)TV의 군사평론가인 쑹샤오쥘(宋曉軍)은 “미국은 일정한 긴장도를 원한다”면서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올 것이지만 미국은 주한, 주일 미군의 존재가치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과 평화협정을 결코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위잉리(于迎麗)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원 박사도 “미국이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이 천안함 사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대북제재에 참여하라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며 천안함 사건은 중국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신문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는 의미심장해 곰곰이 새겨볼 만하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음.
 -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 이 같은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한국의 손을 아직 들어주지 않는 이면에는 북한과의 관계 고려도 있겠지만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 국방 “연합훈련 연기 아니라 시기조정”(6/5)

-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서해 연합훈련 일정 연기와 관련, “훈련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고 의미 있는 훈련이 되도록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성 장관과 3자 대담을 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다른 작전 활동에 참가한 해군 세력을 통합, 조정해야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용 전력을 끌어 모으고 훈련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꼼꼼하고 짜임새 있게 하려고 훈련시기를 조정했다. 연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서해에서 훈련을 기획했다”며 “훈련 바다가 넓고 수심이 깊지 않아 훈련지역을 잘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장관이 ‘대북 추가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해상 연합훈련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소극적인 대북조치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이 책임을 지고 미국은 군사동맹으로서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두고 한 발짝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 김 장관은 ‘중국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샤오티엔 중국군 부총참모장과 30분 넘게 천안함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조사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수거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팸플릿도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충분히 이해했고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중국은 신중하지만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그간 관망 자세를 나타냈던 중국과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4개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들 국가는 귀국해서 본국 입장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미국도 우리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 韓美, 서해상 기동훈련·대잠훈련 한국 주도 합의(6/5)

- 한국과 미국은 서해상에서 실시될 해상·공중 기동훈련과 대잠수함 훈련은 한국군의 주도로 실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양자



대담을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실시되는 연합훈련과 대(對)잠수함 훈련은 한국 측이 주도하고 미측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당초 한미 양국은 미측의 7함대 전력을 주축으로 두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군이 훈련을 주도하고 미측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미측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군사관계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관측임.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간의 양자대담을 통해 ‘극단적인 대북 제재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군 당국의 군사적 대응조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뒀야 하지만 극단적인 제재조치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추가도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조치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분위기로 몰아가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한미가 서해에서 진행될 대규모 연합훈련을 연기한 것이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갑작스럽게 계획된 훈련을 준비하려면 흩어져 있는 전력을 모아야 하고, 유류나 부식 등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에 미측의 어떤 전력이 참가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전력이 참가한다고 했다가 오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곧 어떤 전력이 참가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北공격에 단호한 대응책’ 한목소리(6/4)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날 개막한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면서 대응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낸 것임.
- 특히 양 장관은 28개국 군 대표와 안보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양자대담 및 다자대담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압박에 동참을 촉구해 이목을 집중시켰음. 김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양자대담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무력 공격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미국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한미 양국은 단호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합



- 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 이에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침략행위”라며 “지역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제법을 위반한 또 하나의 사례로 북한의 고립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장관이 천안함 사태 이후 어느 때부터 강경하게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한 것은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뿐 아니라 침몰 해상에서 건져 올린 핵심적인 물증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임.
 - 게이츠 장관이 양자대담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증거는 압도적(overwhelming)이고 결정적(decisive)이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를 잘 말해준다는 것임.
 - 즉 ‘1번’이라고 표기된 어뢰 추진기가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거의 원형에 가깝게 수거된 것이야말로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라는 데 미국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설명임. 더욱이 게이츠 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침략 행동에 반드시 대처해야 한다”고 국제적인 대북공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음. 이에 따라 한미는 이달 중순 이후 서해에서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북한 압박을 위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
 - 하지만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 등이 참가할 연합훈련은 7일부터 10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지만 미측에서 돌연 2주 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해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져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임. 이에 일각에서는 미측이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조치를 비롯한 중국의 인접지역인 서해에서 항모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에 대한 중국 측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실제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항모와 핵잠수함의 참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측은 좀 더 조직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2주정도 연기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중국과의 대담에서도 훈련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는 이달 말 또는 7월 중순께 실시될 연합대(對)잠수함 훈련은 참가 전력이 백령도 남단 해상까지 북상하는 등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측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에 대잠수함 탐지 및 공격 전술 등을 전수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은 5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입장과 공조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한미, 평화위협 세력에 단호 대처”(6/3)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한미 동맹과 관련,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와 ‘확장 억지력’을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한미 동맹은 안보는 물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로 확대·심화되고 있다”면서 “양국 간 동맹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지구적 차원으로 폭넓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이 60년 전 내전의 폐허를 딛고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내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 등을 언급,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오늘 참석하신 참전용사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느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전에 미 육군으로 참전해 활약한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한·미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만든 단체임.

● 오바마 “한국과 협력해 北침략 저지”(6/3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북한에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들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달 이명박 대통령과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준비태세를 확실히 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천안함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북한의 침략 행위”라면서 “여러분과 이 대통령은 놀라운 인내와 자제력을 보여줬다. 여러분은 진정한 힘과 확신이 어떤 것인지 세계에 보여줬다. 미국은 (한국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과 존중은 침략이 아니라 의무를 준수할 때에만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60년 전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의 존속을 위협했다면서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기적과 활기찬 민주주의를 일구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하며 지역과 전 세계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민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동맹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몇 주 동안 목격했듯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양국 간 결속을 거듭 강조했다.

● 美의회, 한국에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6/3)

-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3일 뒤늦게 확인됐음.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한국이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 시장 개방을 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통상 소위원회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테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에서 미국 내 광우병(BSE)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음. 결의안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취해지고 있는 검역조치들은 과학에 근거를 뒤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은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뿐만 아니라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게 수입국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됨.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음.

● 한미, 내주 서해서 대규모 연합훈련(6/2)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다음 주 서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음. 군 고위 관계자는 2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



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규모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력시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된다.

- 시위에 참가할 양국 전력은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 호(9만7천t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과 1천800t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7함대의 핵심 전력인 조지 워싱턴호는 니미츠급 핵추진 항모의 6번함으로 1992년 취역했다. 이 항모는 만재배수량이 10만4천t에 달하며 FA-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E-2C), 헬기 등 90여 대를 탑재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김성찬 해군총장과 피트 구마타오타오 주한 미 해군사령관(준장)이 만나 개략적인 훈련 일정을 협의한 뒤 최근 연합사를 통해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포 사격과 폭뢰 투하, 통신 검색 등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력시위는 2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것”이라며 “1단계는 무력시위, 2단계는 이달 말에 진행될 대잠수함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대잠수함훈련은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 등에서 수중의 잠수함을 격침하는 폭뢰 투하 등의 연습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 백악관 “한국 대응 지지, 긴밀 협의”(6/2)

- 미국 백악관은 1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분명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브스 대변인은 한국 및 관련국들이 추가적 행동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 “한반도 긴장, 美의 3대 골칫거리”(6/1)

-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3대 골칫거리’ 중 하나로 한반도의 긴장을 꼽았다. 이 신문은 이날 메모리얼 데이 휴가를 마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가지 위기를 떠안고 있는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며 1면 머리기사로 3가지 위기를 각각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이 신문이 꼽은 ‘3대 골칫거리’는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 ‘한반도의 긴장고조’, ‘가자지구의 항의데모’임.
-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는 ‘톱 킬(top kill)’ 방식의 원유유출 차단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기 수습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전했고, 가



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사건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음. 이 가운데 한반도 긴장고조 문제는 2면 전체를 할애해 소개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졌음. 2면에는 한반도 지도 그래픽에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공군·해군 전력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했음. 또 한반도 긴장고조와 관련된 기사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내 분위기와 전문가들의 향후 정세전망들을 곁들여 자세히 보도했음. 특히 이 신문은 지방선거와 관련, “미국의 중간선거는 집권 세력에 패배를 안겨주지만, 이명박 정부의 집권 한나라당은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선전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지방선거를 지배하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뉴욕타임스는 6면에 남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게재했음. 이 기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계속 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남한도 대북 심리전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 속보성 스트레이트 기사는 물론 분석 기사, 사실 등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 리 외무차관 “해군 기술진 31일 방한”(5/31)

- 러시아의 해군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31일 서울로 떠날 예정이라고 알렉세이 브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30일(이하 현지 시간) 밝혔음. 브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공동 주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러 포럼’ 전야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가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의 잔재와 파편 등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조사해 사실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해군의 전문 기술진이 한국에 파견된다”며 “이들이 귀국 후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음.
- 브로다브킨 차관은 이어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천안함 사태가 역내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혜와 신중함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브로다브킨 차관은 이와 함께 “46명의 아까운 인명이 손실된 데 대해 러시아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음. 오는 9월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양국 동맹 강화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한-러 포럼은 31일 오전 10시 개막해 ‘한-러 수교 20주년: 경험, 성과 그리고 전망’이란 주제 아래 내달 1일까지 계속됨.



● **美, 올해 美농산물 對韓수출 15% 증가 예상(5/31)**

- 미국 농무부가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 2010년 9월)에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의 농산물 규모가 작년 회계연도에 비해 15%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음. 농무부는 최근 발표한 ‘미국 농업무역 전망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에서 올해 회계연도에 미국 농산물의 전체 수출량이 2009 회계연도보다 79억 달러 늘어난 1천 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음. 이 같은 전망은 3개월 전인 지난 2월보다도 45억 달러나 증가한 것임.
- 농무부는 특히 올해 회계연도에 한국에 수출되는 농산물 규모가 4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는 작년 회계연도의 38억 달러보다 15%(6억 달러)나 증가한 것임. 농무부는 지난 2월엔 올해 회계연도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규모가 4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번에 다시 수출 규모를 3억 달러(7%) 더 늘려 잡았음. 농무부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10월부터 3월까지의 대(對)한 농산물 수출규모가 지난 2009회계연도에는 19억 달러였으나 올해 회계연도에는 25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점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꼽았음.

나. 한·중 관계

● **“정부, 中에 고위급 파견해 직접 설득 검토”(6/6)**

-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후속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차관급의 고위 외교당국자를 중국에 보내 직접 설득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회부한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를 현실감 있게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국의 태도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됨.
- 복수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논의과정을 통한 간접 설득 외에 고위당국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직접 설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소식통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당국자를 보내 직접 설득하는 계기를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긴급 소집한 천안함 관련 간부회의에서 천영우 제2차관 중국 방문을 비롯해 향후 안보리 대응에서 주요 이사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음. 회의에 참석한 한 당국자는 “천 차관이 적절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천 차관의 방중 시점과 관련, “어느 시점, 어느 단계에서 (중국과) 협의하는 게 적절할지가 판단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천 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대사와 면담을 가졌으나 중국 대사와는 접촉하지 않았음.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지난달 28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최고위급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시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중국 직접 설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윤덕용 공동단장 등 합조단 관계자들을 직접 유엔본부로 보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합동조사단을 보내겠다고 해서 안보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中 “천안함 결과 여전히 평가 중”(6/1)

-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진지하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각 분야의 정보를 평가·분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마 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처럼 전문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채널은 늘 열려 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확보하지 못한 1차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한 기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마 대변인은 “원 총리는 방한 기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한국인, 특히 희생자 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한국인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한 공동 조사결과와 각국의 반응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중국은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 대변인은 “중국은 가자지구행(行) 국제 구호선의 승선자들에게 발포한 이스라엘은 규탄하면서 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은 비난하지 않느냐”며 두 사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요구하는 질문을 받자 “기자가 제기한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비켜갔다.
- 한편 이날 중국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4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음. 마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은 양 부장과 국제 및 지역 문제 및 양자 문제와 관련한 공통 관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중국 지도자들도 예방한다”고 말했음. 중·러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사후처리 문제와 6자회담 추진 문제 등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中서 마약밀매 한국인 사형판결 가능성(6/1)

-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변(延邊)지역에서 마약을 밀매하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마약 거래량이 사형 판결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음. 1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연변 룡징(龍井)에서 북한산 마약을 밀매하던 K씨 등 한국인 3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음. 이들은 지난해 6월 북한 마약상으로부터 4.5kg의 마약을 구입,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 가운데 K씨는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룡징에서 북한인으로부터 5.7kg의 마약을 건네받아 운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음.
-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마약 거래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일선 법원에서는 600-800g을 사형 판결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들 한국인 마약사범의 범죄가 인정된다면 거래량만으로는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특히 최근 들어 연변을 중심으로 마약 밀매가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중국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변에서 마약 범죄가 크게 늘는 데다 거래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형’으로 커지면서 이를 근절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라고 전했음. 중국은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영국인 마약사범 아크말 샤이크(당시 53세)씨를 사형에 처한 데 이어 지난 4월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인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 마약 범죄에 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 사형이 집행된 일본인들이 거래한 마약은 1.25-5kg이었음.
- 한국인 가운데는 2001년 10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신모 씨가 사형에 처해졌음. 선양총영사관은 한국에서 그동안 중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지린성에 요청했음.
-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3명의 중국인을 살해한 중국인 천더통((陳德通.41)씨가 2007년 12일 이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됐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



며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가운데는 중국인 2명도 포함돼 있음. 선양총영사관은 또 탈북자 등 한국말을 구사하는 마약사범들에게 속은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다며 낯선 사람의 물건 보관 및 운반 요청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교민들에게 당부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하토야마-오자와 동반사퇴에 촉각>(6/2)

- 정부는 2일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이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기울였음. 특히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일본과는 이날 지방선거 휴일임에도 전 직원이 출근, 일본 정국의 향후 전망과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음. 정부는 일단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동반 사퇴가 오는 7월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하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임.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현상이라도 유지하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현재 5석 정도 부족한 참의원에서의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음. 이 소식통은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동반사퇴한다고 해서 정치적 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기본적 색깔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가 크게 나빠지거나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다른 소식통은 이와 관련, “후임 총리로는 민주당 대표 출신의 간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대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대신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누가 후임이 되든 이번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위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음.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누구라도 흔쾌히 총리를 맡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내각도 대폭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음.
-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가 쌓아온 신뢰 관계는 개인적인 요소로 일본 총리가 바뀌면 새로 또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새 총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따른 재조정 및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후임 총리 인선을 지켜보면서 이 대통령과 새로운 일본 총리의 관계 정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6.3 항쟁> 한일관계 미래와 과제(6/1)

-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항거한 6·3항쟁 46주년을 맞아 바라본 양국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진행형으



로 평가됨. 특히 올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진정한’ 관계 정상화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냉정한 시각임.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양국은 대북 대응에서 ‘찰떡 공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모습이지만 과거사나 독도 문제와 같은 폭발성 있는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임. 물론 1964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양국 관계는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됨.

- 대북 공조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음. 실제 한국이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는 일본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적지 않은 힘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한국에 자본과 기술의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해왔음. 아울러 ‘온 사마 열풍’으로 대변되는 한류(韓流)가 일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문화적 교류가 활발함. 하지만 양국 관계는 잇을만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 및 독도 문제로 부침을 반복해 온 게 사실임.
-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지난 29일 제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 현재의 민주당은 과거 자민당 정권에 비해 과거사 문제에서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함.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실제 양국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수사와 긍정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대체적인 평가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최근 과거사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인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이 간간히 나오지만 그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는 정치인들이 보수적인 일본 유권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이 말로는 ‘과거사 반성’을 외치면서도 우익 유권자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적인 행태로 군대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인 등의 문제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 독도 문제로 들어가면 양국 관계의 점점찾기는 더욱 힘들어짐.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일본 측은 정파를 떠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현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나 해설서, 외교백서 등이 나올 때마다 양국은 외교적 갈등을 피하지 못했음. 외교소식통은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양국이 계속 지고 가야할 숙명 같은 과제”라며 “이 때



문에 한일 관계가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항상 과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의 대만무기판매, 영해감시’ 비난(6/6)

- 중국군 수뇌부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자국의 영해를 감시한다면서 비난했음. 마샤오펜(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미 양국군 사이에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이며 두 번째는 미군 함정 및 항공기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군을 심하게 감시하고 정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음.
- 마 부총참모장은 또 “3번째로는 미국 국회가 2000년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등에 따라 12개 분야에서 양군 간 교류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양국군 간 교류의 걸림돌에 대한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미국 측에 화살을 돌렸음.
- 그는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의 행위는 1982년 중국과 합의한 ‘8.17성명’ 등 양국 간 중요한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관련,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사태의 악화와 긴장국면 조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역시 대만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음.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수십 년째 계속돼 온 것으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중 군사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입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대만협회(AIT)의 레이먼드 버가트 회장도 지난 4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을 만나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군간 협력채널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은 올해 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문제로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전면중단했으며 최근 게이츠 장관의 방중 요청을 거절하는 등 양국 간 국방분야의 교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 <中 끌어안기...美 ‘수위조절’ 나서나>(6/5)

- 천안함 대응을 놓고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온 미국의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북한을 향해 ‘단호한 대응’ 조치의 포문을 열려던 미국이 급작스럽게 ‘수위조절’을 꾀하려는 흐름이 역력해 보임. 당장 한·미가 다음 주 서해상에서 실시하려던 연합훈련을 이



달 중순으로 연기한 것이 이 같은 기류변화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훈련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 해명이지만 천안함 대응을 놓고 미국이 모종의 전략적 고려 하에서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려는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주된 시각임. 특히 훈련의 형태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음.
-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4일 외신과의 회견에서 “안보리 대북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중 어느 쪽을 추진하려 하는지 확실치 않다”고 언급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주는 대목임. 이는 안보리 대응의 수위가 당초 예상됐던 대북 결의안보다 격이 낮은 의장성명으로 ‘톤 다운’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임.
- 김태영 국방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5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도 이 같은 수위조절 흐름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음.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천안함 대응의 결정적 키를 쥐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풀이가 지배적임.
-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실질적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대북 대응조치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서 미국이 일종의 ‘중국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임. 특히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결의안 채택이 현실적으로 무망하고 의장성명을 추진하더라도 내용이 없는 ‘숨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조야(朝野)의 대체적인 시각임.
- 이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논의에 앞서 중국의 심기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중국이 자발적으로 대북 제재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임. 여기에는 중국이 3일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중 요청을 거부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 이는 미국의 천안함 대응 방식에 대해 중국 측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조심스런 행보로 돌아섰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협조 하에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를 이끌어낸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대북 양자제재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옴. 하지만 외교가 내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기류변화 조짐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미·중이 G2(주요 2개국) 차원의 ‘전략적 타협’을 꾀하려는 흐름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주목됨.
- 천안함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임. 이에 따라 미·중은 앞으로 2~3주 이내에 유엔 안보리 논의의 프로세스를 조속히 가동시켜 일정한 수위와 강도를 담은 의장성명을 도출,



일련의 미·중 군사교류 거부 중 최고위급이라고 보도하고 이는 양국 간 군사부문 마찰의 증거라고 분석했음. 이 신문은 미·중 군사 마찰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이란의 핵개발 계획과 관련,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계속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음.

● 美 “천안함 대응 中 동참 기대”(6/2)

- 미국은 1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중국이 받아들이고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팩트들은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어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견일치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마. 중·일 관계

● 中, 日 신임총리에 기대 표시(6/6)

- 중국 정부가 간 나오토(菅直人.63)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 “중·일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큰 기대감을 표시했음. 중국은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4일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어 “우리는 간 총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간 총리가 여러 차례 중·일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는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일본을 성공적으로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기초로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더욱 깊고 전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간 신임 총리는 정견발표에서 “일미 동맹의 기축인 미국과의 기존 신뢰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일 관계 강화의지를 보인 바 있음. 중국 언론들은 간 신임 총리가 오는 12일 상하이 엑스포 행사 참석차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보도에도 주목하고 있음.
- 인민망(人民網) 등 중국 언론들은 일본 매체를 인용,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원 총리에게 엑스포의 ‘일본의 날’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계획을 간 총리가 이어받아 시행할 것”이라면서 “12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문가들도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과 간 총리의 선출 등 최근 일본 정국의 변화에도 중·일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음.
-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하토야마 총



리의 사임은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의혹이 주된 원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양국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또 반관영 중국신문사 등 중국 언론들은 간 나오토 신임 총리의 이력과 성향 등을 부각시키며 총리 교체가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일본 도요가쿠엔(東洋學院)대학 정치학과 주젠룽(朱建榮) 교수도 "간 총리의 이력을 보면 하토야마 총리 못지않게 대중 관계를 중시해 왔다"면서 "1984년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지도자와 광범위하고 폭넓은 교류를 해 왔고 1990년대부터 중국 유학생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오고 있다"고 말했음.

● <日 하토야마 사임에 대한 中반응>(6/3)

- 중국은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사임에 대해 내심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양국 관계의 변함없는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토야마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1일 저녁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재임기간 중·일 관계 발전을 중시한 하토야마 총리는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크게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의 공식 논평에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탈피해 아시아로 눈을 돌린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남. 중국은 그러면서 차기 총리라도 하토야마 총리 못지않게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표명했음. 마 대변인은 "일본 정국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일본과 함께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심도 있고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도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이 중·일 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음.
- 류장용(劉江永) 칭화(清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민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사임은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의혹이 주된 원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만큼 양국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 반관영 중국신문사 등 중국 언론들은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의 이력과 성향 등을 부각시키며 총리 교체가 중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일본 교린(杏林)대학 정치학과 류디(劉迪) 교수는 "일본은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중 우호관계는 대세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일본 도요가쿠엔(東洋學院)대학 정치학과 주젠룽(朱建榮) 교수도 "간 부총리의 이력을 보면 하토야마 총리 못지않게 대중 관계를 중시해 왔다"면서 "1984년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지도자와 광범위하고 폭넓은 교류를 해 왔고 1990년대부터 중국 유학생을 자신의 집



에 초청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인들 역시 일본 총리의 교체가 양국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는 “양국 관계와 일본의 대중정책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그의 사임이 양국관계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하토야마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 직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자는 13%에 불과했음.

● 日, 中에 ‘카툰’ 외교 시동(6/1)

- 일본과 중국이 민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과 TV 드라마 축제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음. 31일 도쿄를 방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만나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음.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내년 각각 축제 또는 문화교류 주관을 열어 애니메이션과 TV 드라마 시리즈 같은 영상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음. 일본 측 정부 관리는 “좋은 제안이므로 중국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양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 총리는 이날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 주요인물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도 참가했으며 이곳에서 헬로키티로 유명한 산리오사(社)의 쓰지 신타로 회장으로 부터 기모노를 입은 헬로키티 인형을 선물 받았음. 귀여운 이미지의 헬로키티는 일본을 상징하는 캐릭터임. 원 총리는 손자가 선물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지 회장은 헬로키티 인형이 일본에서 디자인되지만 중국에서 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국 어린이들이 귀여운 헬로키티 인형을 통해 일본인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2009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일본 영화 ‘오쿠리비토’를 하토야마 총리의 추천을 받아 봤다고 말하기도 했음. 중국 측 참가자들은 양국 총리의 모습을 ‘망가’(일본 만화)의 전설로 불리는 테즈카 오사무가 창조한 로봇 캐릭터 ‘우주소년 아톰’처럼 묘사한 카툰을 보여줬음. 한편 ‘아니메’로 불리는 일본 만화영화는 중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전 일본 행정부는 ‘망가’를 알리고자 외국 만화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식도 열기로 했음.

● 하토야마, 中에 천안함 전향적 대응 촉구(5/31)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31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한에 의한 한국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방일중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이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



장관은 자국 TV 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한반도는 현재 ‘폭발 위험(explosive)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 군함(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끌었음.

-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중은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며, 양국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
- 현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미룬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북한 정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 기 타

● <‘천안함 사태’ 영문팸플릿 효과 있었나>(6/6)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11개국 군 대표들과 양자대담을 한 자리에서 천안함 조사결과를 담은 팸플릿을 건네주며 적극적인 ‘설득외교’를 벌였음. A4 용지 크기로 7쪽 분량의 이 팸플릿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컬러로 된 증거자료 사진과 함께 영문으로 제작됐음. 우리 대표단은 600부를 제작해 싱가포르로 가져왔음.
- 팸플릿에는 천안함의 절단면과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된 ‘1번’ 글자가 있는 어뢰 추진기, 북한의 해외수출용 무기소개책자에 있는 ‘CHT-02D’ 어뢰 사진 및 설계도, 북한 잠수정의 공격 예상 기동로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 특히 북한 소형 잠수정이 모선과 함께 천안함 공격 2~3일 전 서해 비파곳 해군기지 앞 해상에서 훈련을 했던 구역이 표시되어 있고 이 구역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ㄷ’자 형태로 우회해 백령도로 접근한 기동로를 지도에 표시했음.
-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백 마디 말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담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 자료를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모인 상그릴라호텔의 프레스센터와 주요 행사장에 배포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음.
-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마샤오티엔 중국군 부총참모장과 30분 넘게 협의했는데 대부분 천안함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조사과정을 거쳤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됐는지,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다”며 “(영문으로 제작된)우리 자료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 루브산반단 볼드 몽골 국방장관과 풍 콕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 등과의 양자대담에서도 이 팸플릿을 제공한 뒤 우리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 메드베데프 “한반도 안정 중요”(6/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러시아는 최근의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크렘린 궁 알렉산더홀에서 이윤호 주러 한국 대사를 포함한 8개국 주러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 한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다짐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후 “올해 9월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20주년을 맞는다”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과 혁신 분야에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 이 대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부가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문가팀을 보내준 데 대해 한국 정부를 대신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이어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히 꾸짖어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당부했다.
-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배석했으며 지난 2월 부임한 이 대사를 비롯해 독일, 우즈베키스탄, 수단, 이집트, 파나마 등 8개국 신임 대사들이 신임장을 제출했다. 러시아는 대사가 부임하면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업무에 들어간 뒤 추후 날짜를 정해 다른 나라 대사들과 한꺼번에 신임장을 제정함. 한편, 이 대사는 행시 13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LG 경제연구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 <한-러 전문가들 경제협력 ‘한목소리’>(6/1)

- 국내 경제·에너지 전문가들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에 적극 진출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러 포럼’ 이틀째 회의에서 ‘동북아 경제협력과 3대(철도·천연가스·녹색) 실크로드’ 제하의 발제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러시아의 아태지역 에너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러시아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내 개발과 연계된 에너지 분야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한국이 러시아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윈-윈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러시아 측에 “한국과의 투자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천연가스 공급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 가능한 공급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 A.S. 자페소츠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조대학 학장은 ‘러-한 간 협력의 상호 교환’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비결로 한국의 국가구조에서의 유교적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즈니스에서의 상하관계 중시, 부(富)보다는 덕(德)을 우선하는 정서, 상대에 대한 존중,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등을 러시아가 배워야한다고 말했음. 나희승 코레일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실장은 ‘한-러 철도협력: 전략적 발전방안’ 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러 간 철도 협력을 제안했음. 나 실장은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와 물류산업의 선순환 구조 창출을 통해 국제물류 경쟁력 확보 등 한반도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레프 이바센초프 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에 대해 동부 시베리아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자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음. 그는 이 지역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한국기업과 구체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보장의 필요성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스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 간 협력 전망이 밝은 편이다”고 말했음.
- 권원순 교수(외국어대 경제학과)는 이어 토론에서 “지난 20년간 외국기업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반면 한국기업은 러시아가 제안한 제조업 분야의 진출에 주력해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음. 권 교수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해상부유식 석유가스설비(FPSO), 쇄빙 석유가스 운반선, 반잠수 시추선 등 조선 플랜트, 녹색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기술 등을 유망한 협력 분야로 지적했음. 그는 아울러 “양자협력, 남·북·러 3각 협력, 또는 더욱 큰 틀의 전략적 협력 중 어느 방안에 주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경석 LG전자 모스크바 생산법인장은 ‘한-러 투자협력 사례와 발전 방향’ 제하의 발제에서 2006년 모스크바에서 가동에 들어간 LG 전자 공장 사례를 통해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활성화와 진출기업의 부품 확보 등 상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현지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법인장은 “러시아 공장 투자시 부품 공급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현지 부품업체 직원들의 한국 기술 연수나 한국 전문가의 현지 기술지도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부품의 공급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캄보디아, 천안함 어뢰공격 비난(5/31)**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46명을 희생시키고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 공격을 비난했음. 훈센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보낸 29일자(현지시간) 편지에서 “한국의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했다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조사 결과에 매우 놀랐고 이 사태를 우려한다”고 적었음. 이어 북한을 지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 왕국은 불안정과 불안을 유발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악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음.
-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주요 투자국이 되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비판적 자세를 보여 왔음. 캄보디아는 노로돔 시아누크 전 국왕이 김일성 전 주석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1960년대부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음. 김 전 주석은 평양 인근에 시아누크 전 국왕을 위한 주택을 따로 짓기도 했음. 캄보디아는 2003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무렵 일찍이 중재를 제안한 나라들 중 하나였음.

● **한·중·일 표준협약체 구성(5/31)**

-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간 표준화 협의체가 구성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1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표준협력 공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3국간 공동 표준개발을 위해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음. 기표원 관계자는 “조만간 주요 표준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3국 공동표준을 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3국은 특히 규제장벽을 해소하고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과 한의학, 공산품과 전기용품, 전기자동차 충전단자, 스마트그리드, 교통카드 등 분야에서 공동표준을 우선 개발할 방침임.



[참고 1] <인터뷰> ‘한-러포럼’ 주관 김성엽·파노프(연합뉴스, 6/2)

(상트페테르부르크=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양국 간의 분명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이를 좁히려고 서로 노력한 것이 이번 포럼의 최대 성과입니다.”(김성엽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취향에 따라 ‘보드카’나 ‘김치’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포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견해의 표출과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원장)

김성엽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 원장은 1일 저녁(한국시간 2일 오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엠베서더 호텔에서 막을 내린 이들 일정의 ‘제11차 한-러 포럼’을 마치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구동성으로 “쌍방이 천안함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게 된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임성준 이사장 퇴임 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국제교류재단을 이끌어 온 김성엽 기획이사는 이번 포럼에 대해 “한국이 구소련(현 러시아)과 수교(90년 9월 30일)한 지 20주년을 맞는 해에 양국 정부와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여론 주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 20년의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논의한 것을 큰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성과에 대해 김 이사는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수교 18년 만에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진정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역점을 두고 ▲외교·안보 차원의 전략적 관계 ▲러시아 극동지역 등지의 경제협력 ▲문화·교육·언론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천안함 사태 등을 놓고 양국 전문가들 간에 격론이 벌어진 데 대해 “천안함 사태의 성격 및 대응 방식과 관련 미국, 일본과는 이견이 거의 없으나 중국, 러시아와는 상당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인 만큼 예상된 일이었다”며 “이번 포럼은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입장과 정책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인식차 해소 여부에 대해 “양측 간 견해차가 뚜렷했지만 회의실과 식당을 오가며 나눈 많은 대화 덕분에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번 포럼에서 파노프 원장을 비롯한 러시아 측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장기적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대해야 하며 6자회담을 북핵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다자안보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 등 한국의 참가자들은 “6자회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선 천안함 사건 해결, 후 6자회담 재개’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며 “특히 6자회담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이사는 “이번 포럼은 천안함 사태 정국에서 열렸다는 시기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 이사는 안보 분야 외 기타 부문의 성과로 “대러시아 투자나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양측이 공감해 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된 것”을 들면서 “이런 점에서 양자 포럼이 한-러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보나 경제 등 공식 관계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여러 현안에 대해 한-러포럼이 여론 주도층의 민간 채널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 외교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럼을 공동 주관한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의 파노프 원장도 “올해로 11번째 열린 이번 포럼은 수교 후 지난 20년간 양국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적,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파노프 원장은 천안함 사태 외에 ‘러시아의 북핵 책임론’, ‘세력균형 파괴론’ 등으로 쌍방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에 대해 “특정 사안들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유익한 성과”라고 강조한 뒤 “올 하반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의 대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포럼 내용을 외교부와 크렘린(대통령궁)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 아카데미는 우리의 외교안보연구원격으로 사실상 외교부 싱크탱크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에 파견한) ‘천안함 조사단’이 귀국 후 활동 내용을 정부에 보고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노프 원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인 중국의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내가 대답할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외교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 중국 측의 입장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duckhw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6/02/0503000000AKR20100602109400069.HTML>